

## 국제법(국제통상)

###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(행정)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B 국은 A 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. A 국은 이러한 조치가 '1994년 GATT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' (이하 'WTO반덤핑협정')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B 국을 제소하였다. 이에 대하여 WTO분쟁해결기구(이하 'DSB')는 B 국의 위와 같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WTO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판정과 해당 조치를 동 협정에 일치시키라는 권고를 포함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였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A 국과 B 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) (총 20점)

- 1) B 국은 DSB의 권고 및 판정을 즉각적으로 준수해야 하지만,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이행 기간을 부여받는다. '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' (이하 'DSU')에 근거한 합리적 이행 기간의 결정방법과 합리적 이행 기간의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(10점)
- 2) 위 1)에서 결정된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B 국이 DSB의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A 국은 B 국의 반덤핑조치 부파로 인하여 자국의 관련 산업이 입은 피해 금액의 2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B 국의 시청각 서비스 공급자의 A 국 내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(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정지)를 최우선적으로 취할 계획이다. A 국의 위 보복 조치계획의 합법성을 검토하시오. (10점)

제 2 문. 아타카 지역에 위치한 A 국과 B 국은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중, A 국 국경수비대가 B 국 국경수비대를 향해 소총을 발사하자, B 국 정부는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규정하였다. 이후 B 국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A 국 영토 내로 100여 km 진격한 후 A 국 국경지역을 점령하였다. 아타카 지역의 C 국은 B 국의 군사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B 국 군대가 A 국 영토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. B 국 정부는 C 국의 항의 및 요구에 대해 이는 A 국과 B 국간의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40점)

- 1) B 국이 취한 군사 조치가 UN헌장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. (20점)
- 2) B 국의 행위에 대한 C 국의 조치를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을 토대로 검토하시오. (20점)

제 3 문.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총 40점)

- (가) A 국과 B 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다. A 국의 가르타 지역은 B 국과 근접한 국경지역에 있다. 가르타 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B 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민과 종교 및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기에 B 국에 편입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. 이러한 가르타 지역 주민들이 A 국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자 B 국은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였다. A 국은 가르타 지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, 그 배후에는 B 국이 있으며, B 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A 국 중앙정부에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르타 지역 분리주의자들이 A 국에 우호적인 주민을 조직적으로 학대 및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.
- (나) A 국과 B 국간에는 1970년에 ‘양국간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를 위한 협정’(이하 ‘1970년 협정’)을 체결하였다. 이 협정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.
- (다) A 국은 1970년 협정을 근거로 A 국에 우호적인 가르타 주민에 대한 학대 및 추방을 지원하는 B 국의 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려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신청하였다.
- (라) A 국은 B 국을 상대로 1970년 협정의 위반을 이유로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. 이에 B 국은 ICJ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. B 국의 이러한 항변에 따르면, A 국이 주장하는 바는 무력사용금지 의무 위반,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위반,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일 뿐이며,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. 아울러, B 국은 A 국이 제소하기 전에 양국 사이에 어떠한 교섭도 없었으므로, A 국이 근거로 삼는 1970년 협정 제16조를 원용할 수 없기에 ICJ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.
- (마) 1970년 협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.  
“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양국 간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. 단 6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ICJ에 해당 분쟁을 회부한다.”

- 1) A 국의 신청에 대해 ICJ가 잠정조치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시오. (20점)
- 2) ICJ의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B 국의 항변에 대해 ICJ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시오. (20점)

##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